

#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 부·울·경 미래 거점 육성

해수부, 동남권 육성 방향 발표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 추진  
진해신항 글로벌 물류 허브 구축



부산 동구에 자리한 부산국제컨벤션센터.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이재명 정부의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이 제시됐다. 동남권을 국가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북극항로 ▲첨단제조 ▲해양금융 ▲친환경 에너지 등 4대 전략이 추진된다. 북극항로와의 연계도 적극 시도된다.

정부는 부산을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또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북극항로 활성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게 요지다.

우선 2030년 이후 도래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중장기적 국가 전략차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구간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이어 2030년 한·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 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내 내·쇄빙선대 확충을 비롯해 극지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둘째,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 해양금융·해사법률·친환경 병커링·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 항만·물류·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I)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 남부 해양수도권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적인 해운·물류기업 유치에 추진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개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채용연계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또 해양수산·이공계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해양분야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인재 유입 등 남부 해양수도권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살기 좋은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남부 해양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남해안 관광자원을 잇는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도 시도한다.

황중우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으며, 남부 해양수도권의 성공은 5급3특 국토공간 대전환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원활한 기업이전 지원을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또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절차,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 장관은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환치기 등 ‘코인 뒷거래’ 처벌 받는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의결  
재경부 장관 앞 등록, 한은 보고 의무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의 해외송금 등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이른바 ‘환치기’ 등의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도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재경경제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 의무 도입이다. 암호화폐 거래도 기존 외환관리 체계 내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향후 해외로 가상자산을 내보내거나 국내로 들어오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 사전 등록’을 거쳐야 한다. 또 이 같은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 국내를 이탈하는 자금이 급증하면서, 기존 외환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을 활용한 환치기와 해외 재산 은닉, 불법자금 이동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환치기란 정식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두 나라 사이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비공식 송금 방법이다. 예로, 국내에서 받은 원화를 외국환은행 중개 없이 바로 미국에서 달러화로 지급하는 방식 등이다.

정부는 해당 정보를 국제정관세정·금

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자금세탁 방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확대에 대응해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은행 중심이던 외환 모니터링 체계를 가상자산 영역까지 확대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환당국의 조사하에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반도체 수출 호황에 韓 성장률 2.5% 전망

산업업,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산업의 폭발적인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2.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간 무역수지는 219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가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2.9%를 기록한 데다, 하반기에도 2.1% 수준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수출이다. 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급증한 924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경쟁과 고성능

메모리·SSD 수요 급증이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유발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구조다. 반면 수입은 에너지 및 중간재 중심으로 11.6% 증가에 그쳐, 연간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치인 21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가 포함된 IT산업군이 연간 81.9% 성장하며 압도적인 독주 체제를 굳힌다. 주력산업 수출의 45.7%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올해 전년 대비 101.9%라는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 역시 기업용 SSD 수요 확대로 93.2% 급증한다. 바이오헬스(6.6%)와 이차전지(6.8%)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수와 전통 제조업은 온도 차를 보였다. 민간 소비는 금리 인하 지원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되며 연간 2.2%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aT, 브라질서 1700만달러 수출상담 성과

상파울루 식품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브라질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을 선보이는 등 K-푸드의 남미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8~21일 나흘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2026 상파울루 식품박람회(APAS SHO W 2026)’에 참가해 총 1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브라질에선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우수수출업체 9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이 박

람회에 참가했다.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한 APAS SHOW는 전 세계 900개 이상의 기업과 15만 명 이상의 식품업계 관계자가 찾는 남미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다. aT 관계자는 “한국 농식품의 수출 신시장인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특히 ‘aT 한국미식관’을 별도로 구성해 중남미의 베스트 K-푸드 전략품목인 스트리트 푸드와 음료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김치볶음밥과 김치전 밀키트, 잡채, 비빔밥 등 한국관만의 특색 있는 제품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주류 수출기업 관



‘2026 상파울루 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마련된 통합한국관 /aT

계지는 “K-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주를 선보였는데, MZ세대의 이목을 끌며 성장 가능성을 봤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시작

농식품부, 3~4월치 신청액 102억

중동 사태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가운데 3, 4월 사용분 신청액 102억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농업경영체 21만 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국제유가 폭등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불어난 데 따른 지원이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한 농

업경영체에 한해 지급한다.

지난 2022년 5월 가격이 기준이 된다.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이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원한다. 한도 내에서 보전하게 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총 6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에 529억 원, 시설농기난방유 지원에 94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3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분 농기계용 경유와 3, 4, 9월 사용분 시설농기난방유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3, 4월분 지급액 102억 원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세종=김연세 기자